

제3장 제1공화국의 정치

제1절 정당의 변천 및 선거관리

1. 정당의 변천

1) 다수정당의 병존

해방후부터 제1공화국 수립시까지 한국민주당은 소위 인민공화국을 타도하고 그 후 미·소 공동위원회에 민족적 주장을 내세워 대한민국 수립에 많은 공헌을 세웠으나 정부수립에 극히 소수밖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5·10 선거를 거친 한민당은 이미 당세가 위축되어 소장파와의 대립에서 인기가 저하되어 감을 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독당원이던 대한국민회의 신익희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세력을 규합하여 제2국회 회기말에 이르러 1949년 2월 10일 한민당을 해체하고 민주국민당을 결성하였다. 간부진으로서는 위원장에 신익희, 고문에 백남훈, 서상일, 조병옥, 선전부장에 조재천 등이었다.

원내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소장파는 1949년 5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이에 김약수등 의원 13명이 체포되는 소위 국회 푸락치 사건(남로당의 대남정치공작대에 의한 7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의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몰락하였다.

2) 자유당의 창당

국회 성립당시 원내에는 독립촉성구락부계와 한민당계의 대통령중심제 주장파와 태백구락부, 무소속등으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양파로 나뉘었으나 다수파인 한민당계에서 이승만 국회의장 의도대로 대통령중심제로 확정된 후 이승만 대통령의 연립내각조직은 한민당으로 하여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과반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재무부의 김도연 1인밖에 입각치 못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점차 반 이승만 운동을 하였다.

민주국민당측에서 의장직을 차지한 2대 국회는 6. 25 남침을 당하자 대전, 대구, 부산등지로 전전하게 되었다.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장양민학살사건을 거치면서 여당격인 한정, 국민회, 대한국민당등의 합동체인 신정동지회는 이 대통령을 지지·옹호하는 반면 야당격인 민주국민당은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면서 신정동지회의 이갑성을 물리치고 민주국민당의 김성수가 부통령에 당선되자 여당측에서는 이같은 야당세력의 팽창·확대는 정부시정의 원활을 기할 수 없다는 우려하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형성을 노렸는 바 1951년 8월 15일 이승만은 신당조직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종래 경시해 오던 정당정치를 위하여 선두에 나서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 영도력강화와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외에서는 국민회측의 이활이 중심이 되고 노총의 주종필과 농총의 채규환이 주동이 되어 참여하였고 원내에서는 공화민정회의 양우정, 이재형등이 주동역할을 하였다. 12월 23일 부위장 선거에서 이갑성, 김동성 양인을 선출하고 국회의사당에서 결당대회를 개최하여 정식 자유당으로 발족하였다.

3) 민주당의 성립

사사오입개헌파동에서 총퇴장한 야당측 의원들은 1954년 11월 29일 본회의장 퇴장 직후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 동 구성체를 원내교섭단체로서 호헌동지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호헌동지회는 55년초 신당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의 준비를 거쳐 9월 18일 시

공관에서 발기인대회 및 발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최고위원에 신익희를, 최고위원에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백남훈 등 4명을 선출하였다. 이로서 민주당은 종전부터의 장면, 정일형 등의 흥사단계, 현석호, 이태용 등의 자유당탈당계 및 제2대 말기의 무소속구락부가 규합하여 원내세력은 33석을 유지하였다.

2. 선거관리

제1공화국 법제도 하에서는 각급 선거관리사무가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1948년 3월 17일 제정·공포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은 선거위원회를 내무부에 부설하고 중앙 시·도 및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설치토록 하였는 바 각급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각급 일반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대거 참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서도 대동소이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선거위원회는 1948년 이후부터 1960년초까지 수차례 걸친 각종 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기구로 존속되어 왔으나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일반행정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내무부의 부속기관화 되었고 따라서 관권선거 및 부정선거 시비를 낳았으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확한 개표관리등에 있어서 상당한 불신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 등에서 저질러진 이른바 올빼미표·피아노표 등으로 지칭되는 개표부정사건은 마침내 4. 19. 학생의거를 일으킨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